

종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소급적용 문제 있다”

盧대통령 퇴임 13일 앞두고 거부권

정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을 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국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고,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을 의결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

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의 이 법안은 오는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통과시킨 선심성 의원입법안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의 법안 공포 거부권 발동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이 재의결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 반발해 표의 이탈이 없을 경우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 대변인은 “환급특별법은 지난 2005년 3월 현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 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가 특별법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 법이 법적 안정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및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된 사례가 없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 기존에 위헌 결정된 50여 건의 조세, 부담금에 대한 환급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 불필요한 행정비용, 국가재정운용 부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해군 제3함대 사령부 표지석 제막 한 가운데 열렸다.

해군 제3함대 사령부(사령관 원태호) 표지석 제막식이 12일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해군 제3함대 사령부 정문 앞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김일태 영암군수, 이원일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 (전남도 제공)

사이버 세상에서 여수엑스포 체험

전남도 '세컨드 라이프'에 구축 참가기업 마케팅·투자 등 활용

인터넷 상의 3차원 가상 현실 세계인 '세컨드 라이프'에서도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

전남도는 12일 “여수 엑스포 전시장을 3차원 가상현실로 제작해 전 여수 엑스포 세컨드라이프를 구축, 엑스포 참가기업들이 이곳에도 입주해 마케팅과 시장조사, 홍보, 그리고 고객상담과 투자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IT기업 ‘린드 랩’이 2002년 첫 선을 보인 가상 공간인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는 가입자가 전세계적으로 무려 1천300만명에 이르고, 지난해 말 정식서비스가

개시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십만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전남도는 세컨드 라이프의 한국 파트너인 T엔터테인먼트사와 손을 잡고 200여원을 들여 3차원 가상현실 구축을 통해 여수엑스포 전체를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13일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앞으로 T엔터테인먼트사와 MOU를 체결, 3차원 가상현실 기술 연구와 개발·마케팅을 주업무로 하는 ‘Sera Lab’ 본사의 전담 유치 등을 통해 ‘여수 엑스포 세컨드 라이프’ 구축 등 본격적인 3차원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특히 여수 엑스포 세컨드 라이프 구축에 만 그치지 않고, 가상 공간을 매개로 온 오프라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미국 린드랩이 개발한 가상 현실 사이트. 2002년 문을 열었으며 일정 임대료를 내고 사이버 공간에 마치 현실과 같이 집, 거리, 자연이 꾸며진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상품을 사거나 팔고, 친구를 사귀는 등 현실과 똑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인을 연계한 홍보, 체험, 판매, 정보제공, 유통, 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또 ▲도서·해양 콘텐츠 활용제작센터 건립 ▲도서·해양 콘텐츠 국제페스티벌 개최 ▲영산강 운하 연계 실버타운 조성 및 실버 문화 콘텐츠 제작 등도 추진해 전남을 ‘3차원 가상현실’ 글로벌 생산기지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삼성-소프트뱅크, 도요타, IBM, 아마존닷컴, 하버드대 등도 세컨드 라이프에 입주해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 중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과기원 학부 신설 될 듯

이달 임시국회 처리... R&D 특구 지정 가속도

광주 R&D 특구 지정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던 광주과학기술원 내 학부신설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순조롭게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숙원 사업이던 ‘광주 첨단 R&D 특구 지정’ 사업도 가속도를 내게 됐다.

김동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광산)은 12일 “학사과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개정안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

하기로,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광주지역 의원들의 지속적인 법안 처리 요청을 당 지도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사실상 방치되어 왔으나, 김동철 의원을 비롯 광주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17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애아 의무교육, 고교까지 확대

2010학년도 부터

전남 친환경 농자재값 업체별 최대 10배 차이

전남도는 친환경 농자재를 적정가격에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 업체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도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판매 희망가격을 조사해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친환경농자재 가격은 왕우렁이의 경우 21개 시·군 56개 업체의 제품이 망라돼 있으며, 이들 제품은 가격 차이가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목초액은 순천 발광농협 등 4개 업체가 2당 3천원에서 2만5천원 선에, 키토산은 나주 서울환경산업 등 5개 업체에서 2당 1만3천원에서 3만원 선에 판매를 희망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으로까지 연장적으로 확대되고 13세 미만의 장애영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아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아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것으로 오는 5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대비해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장애아 의무교육 실시시기,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의 설치·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연한을 유치원, 고교과정으로까지 확대했다. 만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현재는 초·중학교 과정의 장애아동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또 만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현행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진단을 받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주민증 재발급, 모든 시·군·구서 가능

신청인 동의 받아 지문 확인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시청과 군청 및 구청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기관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 시행령 5건,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안 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발급 신청시 증명서 등이 없어 신분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한내 통지 후 1년이 지나도록 찾

아가지 않을 경우 회수·파기하고 재발급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국무회의는 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전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는 해당가구주나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가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질환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R&D 특구 지정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던 광주과학기술원 내 학부신설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순조롭게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숙원 사업이던 ‘광주 첨단 R&D 특구 지정’ 사업도 가속도를 내게 됐다. 김동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광산)은 12일 “학사과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개정안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광주지역 의원들의 지속적인 법안 처리 요청을 당 지도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사실상 방치되어 왔으나, 김동철 의원을 비롯 광주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17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R&D 특구 지정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던 광주과학기술원 내 학부신설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순조롭게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숙원 사업이던 ‘광주 첨단 R&D 특구 지정’ 사업도 가속도를 내게 됐다. 김동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광산)은 12일 “학사과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개정안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광주지역 의원들의 지속적인 법안 처리 요청을 당 지도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사실상 방치되어 왔으나, 김동철 의원을 비롯 광주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17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기자 redplane@kwangju.co.kr

산행안내 2월 14일(목) ▲광주과기원 R&D 특구 지정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던 광주과학기술원 내 학부신설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순조롭게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숙원 사업이던 ‘광주 첨단 R&D 특구 지정’ 사업도 가속도를 내게 됐다. 김동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광산)은 12일 “학사과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개정안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광주지역 의원들의 지속적인 법안 처리 요청을 당 지도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사실상 방치되어 왔으나, 김동철 의원을 비롯 광주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17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기자 redplane@kwangju.co.kr

금당부동산 223-7400 010-632-5659 19시:충정로574리코너2층) 사찰(절) 및 사찰부지 ●남구 월산동 문화방송국역. 광주 시내 전체를 자랑하며, 무등산이 정면으로 보이고 주변은 APT 6천세대 이상을 재개발하는 최상의 요지. 대지 501평 공사비가 5억 5500만원 매도액 조정가능 ●광산구 하남 월곡동 부근 산정동소재 3층짜리. 주변은 아파트 집단지역과 상가지역이 형성되 도심 포교당이나 여스님 운영 사찰로 적합. 대지 61평 건평 87평 담보액 4천 매도액 조정가능 분양권 매매 운임동 벽산블루밍 ●107동 46평형(가운대층) 로얄층 타워형 남향 전망 최고 층분양가 2억 9876만 원 계약금: 14,850,000원 부대: 2억 9천만 원

E-Supporter 어학원 http://www.e-supporter.co.kr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어학원에 비해 가격 최저! 효과 최고! E-Supporter가 연수비용 영어공부 하기 좋은 이유? 1. 지속적 통합 관리 시스템 2.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 3. 100%의 영어사용환경을 유지 4. 세미스파르타식 어학원 필리핀 어학연수의 무한공감!! E-Supporter에서 선택순 30분께 연수비용 파격적 할인! 비용내 포함 내역 (항공요금 및 교재비 별도) - 비자 연장 및 ssp 발급, - 마닐라 공항 픽업, - 청초 빨래 식사 등의 각종 편의 제공, - 각 레벨에 따른 수료증 발급

광주 R&D 특구 지정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던 광주과학기술원 내 학부신설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순조롭게 타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숙원 사업이던 ‘광주 첨단 R&D 특구 지정’ 사업도 가속도를 내게 됐다. 김동철 의원(대통합민주신당·광주광산)은 12일 “학사과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개정안과 함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광주지역 의원들의 지속적인 법안 처리 요청을 당 지도부가 전격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사실상 방치되어 왔으나, 김동철 의원을 비롯 광주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17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경기자 redplane@kwangju.co.kr